

# 경제 발전의 초석 다진 이승만 대통령

## 시론

###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흔히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가장 큰 공적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통한 안보의 확립으로 본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성장 신화에 비유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정부가 단행한 경제 및 사회 정책의 성공이 없었다면, 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먼저 단행한 정책은 농지개혁이었다. 대지주의 농지를 정부가 지가증권을 발행해서 구입하고, 이를 낮은 가격으로 소작농 및 소농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작농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자작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일부 대지주들은 이때 받은 지가증권을 이용하여 근대산업에 투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의미하여 농업 자본의 산업자본화가 이루어졌다. 또 하나 중요한 개혁은 바로 교육개혁이다. 정부 수립 직후 팍팍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문화는 정부의 재

정지출 중 8%를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6·25전쟁 중에도 교육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대학생의 경우 전시에에도 불구하고 징집이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1954년부터 초등교육을 의무화하면서 1954년부터 초등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교육의 혜택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지개혁과 교육개혁의 성공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향후 산업화를 위한 인적자본이 형성된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연구한 미국의 로드리크 교수는 한국과 대

###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소득분배 개선, 인적자본 형성 수입대체화로 민간기업 성장 경제에서도 '건국의 아버지'

만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산업화 초기의 양호한 소득분배와 높은 교육 수준이라고 하였는데, 이 기반이 1960년대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구축된 것이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자산의 처분 즉 적산불하도 대부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들 자산 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은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지만 나머지는 민간기업에 불하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에 불하되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특히 시비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적산불하는 실보다 득이 많았던 정책이다. 우선 정부의 재정수입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주요 기업들을 민간에 불하함으로써 민간 기업에 기반한 자유시장 경제의 확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1953년 종전 이후 추진한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시작이었다. 이는 중요한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생산으로 대체하자는 전략이며, 3반산업(설탕, 밀가루, 면방직) 육성을 시작으로 시멘트, 다이아몬드, 라디오 등 주요 공산품들의 국산화에 성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1960년대 이후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특히 면방직 산업의 경우 50년대 말이 되던 이미 내수를 충족하고 생산 과잉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1961년 원화개혁의 평가절하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자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설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1950년대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은 1960년대 수출진흥 정책의 초석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승만 정부는 소득분배의 개선과 인적자본의 형성, 민간기업의 성장과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정부였으며 그 이면에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뢰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철학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와 안보에서만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건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들어 마땅할 것이다.

## 김준의 맛과 성 1144

### 비양도 꽃멜저

6월이면 제주 비양도에는 어김없이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주민들은 손님을 맞기 위해 신새벽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고, 해녀할망은 포구에서 그 배를 기다린다. 주민들이 그렇게 배타게 기다리는 손님은 꽃멜이다. 멜은 멸치의 제주도 방언이다.

새벽 서너 시에 바다로 나가 전날 처 놓은 그물을 걷는다. 밝은 낮에 하지 않고 새벽에 나서는 것은 낮에는 해녀들 본업인 물질을 해야 하고, 아침 경매에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꽃멜은 멸치가 아니라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정어라 새끼멸치이다. 몸이 긴 은빛 줄이 있어 얽히면 멸치와 다른 종이다. 여름이면 제주 연안으로 몰려와 모자반 등 해초나 모래밭에 알을 낳는다. 그곳이 비양도 주변 바다다.

올해는 6월 15일 첫모습을 보였다. 비양도 인근에 머무는 시간은 한 달이다. 옛날에는 건너 금능리나 협재리 등에서도 잡았지만 지금은 오직 비양도에서만 잡고 있다. 비양도에서도 10여 척이 조업을 했지만 지금은 딱 두 척만 꽃멜잡이에 나서고 있다.

그물을 걷기 위해 두세 명이 바다로 나가는 배를 타야 한다. 그리고 포구에서 가져온 그물을 털 내다섯 명이 대기해야 한다. 지팡이 크기의 작대기로 멸치그물을 타는 이들은 대부분 해녀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배를 타는 것도 그물을 타는 것도 버겁다. 여름 한 달만 이루어지는 꽃멜잡이를 위해 일할 사람을 찾는 것도 여의치 않다. 남편과 해녀인 아내가 죽고 함께 배를 타고 마을 해녀삼촌들이



그물을 타는 이유다. 힘들지만 꽃멜잡이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일반 멸치와 비교해 몸값이 열 배 높기 때문이다.

이날도 새벽 네 시에 시작해 한라산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나서 끝이 났다. 그물에서 떼어낸 멸치는 바닷물로 깨끗하게 세척한 후 곧바로 한림항 수협으로 운반되어 판매된다. 일반 멸치는 젓갈을 담가 오래되면 살이 녹아 사라지지만 꽃멜은 그대로 형체가 남아 반찬으로 좋다. 여름에 젓갈을 담그면 다섯 달이 지난 후 겨울에 먹기 좋게 숙성이 된다. 제주 오일장에서 곧잘 꽃멜젓을 만날 수 있다. 일반 멸치보다 단단하니 씹는 맛이 좋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社 說

### 박영수 영장 청구에 21개월, '재판 거래' 권순일 수사는 언제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정치·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부정적인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대장동 스캔들 초기부터 불거졌다.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회사 몫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익대의 시세 차익을 봤다가거나 과장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2021년 9월이다. 구속 영장 청구에 1년 9개월이 걸렸더니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까지 검찰의 행보는 수사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은 수사 초반 박 전 특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게 전부였다. 정권 교체 후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던 검찰은 지난 3월이 돼서야 압수 수색에 나섰다. 박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국가가 여야 합의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자 처음으로 수사다운 수사를 한 것이다. 그 후 "박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사업을 돕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요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박 전 특검은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 같은 의혹을 받는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미적거린다면 '제 식구 감싸기'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도 면피용이 아닌 된다.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중에서도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가장 부진하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하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길을 열어줬다. 당시 대법관 중 최선임이던 권 전 대법관은 5대 5로 무죄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 핵심인 김만배씨는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찾았고,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매달 135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부인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다. 사실이라면 사법부 문을 닫아야 할 엄청난 사안인데도 수사에 전혀 진척이 없다. 압수 수색도 한 번 없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 국회 윤리심사도 무시하는 김남국, 민주당 민고 이러나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100억원대 코인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 문제를 4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자문위원장은 "거래 내역은 안 내고 대신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기사를 스크랩해서 제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코인 거래 내역은 징계할지 말지를 결정할 기초 자료다. 본인이 떼뒀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해 징계감이 아니라 해명해야 한다. 또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심사를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심사받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김 의원 때문에 법이 바뀌어 모든 국회의원은 이달 말까지 가상 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어차피 곧 공개할 자료를 왜 윤리심사 자문위에는 내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든 징계를 회피하고 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아닌가. 김 의원은 그동안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 숨길 게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민주당

탈당 후에도 당이 요청하면 얼마든지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그는 민주당 자체 조사 때도 가상 자산 변동 내역, 주요 거래 종목 수익률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했다.

김 의원은 "매일 라면만 먹는다" "운동화에 구멍 났다"며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연출해 후원금을 모으고, 뒤로는 100억원대 코인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코인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을 만들었다. 헬리콥터 참사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회의 도중 코인을 거래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의원 자격 상실이다. 의혹이 터지자 3주일 가까이 잠적해 국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도 세비는 다 받아갔다.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2개월이 돼가지만 진상 규명엔 진척이 없다. 김 의원은 민주당 탈당 외에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민주당이 뒤에서 그를 감싸주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김 의원 제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장은 "다른 의원 징계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순서"라고 방탄막을 쳐왔다. 무슨 일을 해도 민주당이 막아주니 김 의원도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것이다.

### '불체포 특권 포기' 밝혀놓고 계속 이어지는 말장난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끝내 '불체포 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 요구대로 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면 그만인 일이었다. 그런데 특권 포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는다'는 말장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 당론으로 부결시킨 게 아니었다. 겉으로 의원들 자유 투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결 투표를 했다. 앞으로도 당론은 정하지 않은 채 집단 부결 표를 던진 뒤 불뻐하려는 것 아닌가.

굳이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것도 이상하다. 정기국회 중이라면 한 사람 영장심사를 위해 정기국회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인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이력저런 핑계로 미루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럴 필요가 없다.

지금 민주당에선 돈 봉투 사건이나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많다. 이 대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당 내부에선 "앞으로 줄줄이 구속영장이 날아올 텐데 어떻게 가결 당론을 정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겉으로 반만 안 한다면서 뒤로는 불체포 특권 뒤에 계속 숨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대선 때도 이 대표 주도로 정당혁신추진위를 띄웠다.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강력·성범죄 공천 제한 등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새로 임명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정치권 경력이 거의 없어 '들러리 혁신위'라는 말이 나왔는데 첫 혁신안부터 당 지도부가 교묘하게 물타기를 해버렸다. 말장난과 가짜 혁신이 아니라 실천과 진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류근일 칼럼  
6.25 73주년 특집 4

## 문재인의 "6.25는 미중전쟁" 운운...김일성 책임 뭉개기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newdaily.co.kr

**지정학 내세운 패권전쟁론(반반 책임론)...**  
**복침설·남침유도설 박살나자 등장**  
**문재인의 교묘한 역사 왜곡...전쟁 일으킨 악당·피해자 동급 대우**  
**태평양 전쟁도 마일 책임 반반?...그러면서 축창가는 왜?**

[면담자 주] 올해는 △ 건국 75주년 △ 6.25 73주년 △ 한미동맹 결성 50주년 △ 70주년. 전쟁은 국인을 [자칭] 시킨다. 전쟁은 나라와 국민의 정체성(identification)을 확인 시킨다. 침략 피할까, 적군 야근, 작동지가 명확하게 구분 되기 때문이다.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최초의 [자유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 무려 반만년만,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대한민국 국민]이란 의식이 탄생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깨우쳐 [21대]가 국민 의식으로 승수하기엔 너무나 시간과 유·시행력이 필요하다. 인구의 80% 이상이 문맹인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그랬다. 건국 2년도 안채, 6.25가 터졌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란 의식은 스탈린 모택동-김일성의 남침을 막아내는 전쟁을 통해, 압축적으로 그리고 혹독하게 단련되어, 단단하게 익어 갔다.  
 서구 근대국가들이 수백 년 걸려 이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수립 + 산업화 + 세계 시장경제 체제 + 정보화 = 현대 문명국가]를 우리는 압축적으로 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뤄낸 이런 문명사적 성취를 자국만 게 [전쟁 6.25] 이런 차원에서 [전쟁 6.25]의 의미를 4회에 걸쳐 집중해부 분석한다.

**문재인, 은근슬쩍 김일성 면책?**

[6.25는 스탈린·마오쩌둥-김일성의 남침이었다는 기본성격을 못본체 한 채, 그것을 그저 "미·중 전쟁의 대리전이었다"는 식으로 추상화하는 경향이 일각에 있다. KBS가 2021년에 만들었다는 <1950 미·중 전쟁>이라는 동영상과 그를 정리한 책에 대한, 문재인의 해석이 예컨대 그런 식이다. 그 영상과 책을 두고 문재인은 이렇게 평했다.

**복침설·남침유도설 무너지자 등장한 패권전쟁론**

좌익은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6.25를 처음엔 복침이라고 우겼다. 이게 잘 먹히지 않으니까, '남침 유도설'이란 궤변(브루스 커밍스 등을 늘어 놓았다. 그러다 1989년 소련이 망한 뒤에 나온 크렘린 비밀문서에 의해, [6.25는 스탈린·마오쩌둥의 허락을 받아 김일성이 일으킨 것]이라는 게 만천하에 입증 되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제 또, "전쟁을 누가 먼저 일으켰는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굳이 따질 필요도 없다. 어쨌든 마소 냉전과 미·중 세력 다툼이 일으킨 결과물이었다"는 무로, 일명 '동맹 넘겨가려는 수법'이 다시 고개를 든 셈이다.

**패권전쟁론은 두루뭉술 반반 책임론**

NL 좌익은 아시아 대륙의 역사를 [외래 제국주의 + 토착 민족 세력]에 대한 아시아 [민족·민중]의 저항의 역사라고 규정한다. 6.25 전라도 그런 틀에서 바라본다.  
 다만 6.25는 소위 '인민 봉기'에 의한 게 아니라, △ 정규군에 의한 가습 남침이었기 때문에 △ 그리고 스탈린·마오쩌둥이 시켜서 한 국제 침략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약점이 되어, "그래 우리가 먼저 일으켰다. 어쨌래?"라고 내지르지는 못하고 있다.  
 6.25 당시 북한군은 38선을 자기들이 먼저 무시하고 남으로 침략했다. 이에 한국군과 미군도 38선을 존중할 의무가 없었다. 한·미군은 그래서 당연히 압록강까지 진격했다. 저들이 먼저 낙동강까지 진격했으니까, 왜 저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냐?  
 그런데도 증공은 한·미군이 마치고 38선을 먼저 넘어 복진했

다는 양,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을 돕는다)' 전쟁을 자행했다. 자유인들은 이 선·후를 뒤집는 좌익의 기만적 논리에 절대로 휘둘려선 안 된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칼럼 : 6.25 73주년 특집 시리즈>**

<p><b>[특집 ①]</b> 6.25 계기로, 한국은 반만년만에 세계로 나왔다</p>	<p><b>[특집 ②]</b> 6.25 계기로, 북한은 동굴로 들어갔다</p>	<p><b>[특집 ③]</b> 무엇 두고 싸워 왔는가... 친(親)서구 vs. 반(反)서구</p>
--	---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6월 27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37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